

「농민권리선언포럼」 현장토론회(제4차 회의) 개최결과

□ 개요

- 목적: 농민권리(선언) 관점에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 농민권리 보장 방안 모색
- 주제: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에서 농민의 참여와 권리
- 일시: 2021. 9. 2.(목) 14:00~16:30 (2시간 30분)
- 장소: 괴산 사리면복지회관 세미나실(충북 괴산군)
 - *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유튜브 화상중계, Zoom 참여 병행
- 참석: 사업대상지역의 권리침해 농민, 포럼 위원 등 26명

구분	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개회	14:00~14:10	10	○ 개회: 김정열(포럼 대표)	사회: 송원규 간사
주제 발표	14:10~14:30	20	○ 진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침해	발표: 김기형 회장 (진천군농민회)
	14:30~14:50	20	○ 괴산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농민권리 침해	발표: 송요일 공동대표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정리	14:50~15:00	10	휴식	
토론 질의 응답	15:00~16:15	75	○ 좌장: 구점숙 위원장(경상남도 농특위 농어민인권분과) ○ 지정토론(30분): 하승수 대표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분) 괴산군 산업단지 담당자 ○ 현장토론(45분): 마을이장 등 포럼 참석자	
폐회	16:15~16:30	15	○ 종합정리 및 폐회	좌장 및 사회

□ 주요 논의내용

- 지정토론(하승수 대표변호사)

①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문제

- 상반기 기준 1,242개 산단이 있음. 충남북에서는 지자체장 중심으로 조성하려고 함. 분양되는 것과 입주해서 가동되는 것이 다름. 국가 산단의 가동률이 70%, 현재는 80% 정도임. 지방산단 경우는 조사가 필요함.

- 충북은 현재 15개이며 추가로 조성하려고 함. 국민들은 산업단지라면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지방 산단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이 제안, 지자체가 승인하면 추진됨. 사업주체가 민간기업이며 토지소유자의 50% 동의하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음. 농촌마을을 파괴하고 농지를 강제수용하는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임.
- 진천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SBS를 지배하는 태영건설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이며 돈벌이 사업으로 하고 있음. 농지를 강제수용해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땅장사를 지자체가 도와주고 있는 것임.
- 증평군의 도안면은 제2농공단지 추진,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었으며 강제수용만 남았음. 마을에서는 강제 수용되는 시점에 알게 되었고 공청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알지 못했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산업단지의 긍정성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방산단은 기업이 땅장사를 하려는 것임. 진천의 경우는 태영건설, 괴산은 SK와 토우건설임. 괴산의 경우는 괴산군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산단을 조성하는데 국비가 500억 이상, 괴산이 27억의 군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괴산군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까지 지원해서 산단을 만드는데 이익은 민간기업에 돌아가는 것으로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임.
- 경남지역 사례로 경남서부단지 민간기업에서 제안하여 산단으로 지정 되었으나 기업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하게 되었고, 절대농지 포함하여 손쉽게 대규모 땅을 확보하고 사업이 엉뚱한 용도로 편법으로 이어지게 됨.

② 농지 전용

- 산업단지로 인해서 농지 전용 규모가 많아지고 있음. 택지 개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

③ 절차의 비민주성

- 민간업자가 제안서를 내고 산업단지로 추진된다면 추진단계에서 개발 행위 허가보유, 확정적인 것 같으나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으며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고, 주민들은 의견을 내도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고 있는 현실임.

④ 농민의 인권,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산업단지

- UN농민권리선언 10조에 참여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음. 농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해서는 참여권 보장해야 함.
- 폐기물은 안 되며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됨. 세계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산업단지나 폐기물 추진에 관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음.
- 산단과 매립지 추진 사례가 충북지역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산업폐기물의 종류도 충북지역 지정 폐기물에는 폐유 등 유해성분이 많으며 이것은 농촌 지역을 매립하겠다는 것임.
- 충남 당진에는 폐기물매립장 들어서 있음. 안전하다고 하나 현대제철 자체 매립장에서 최근 주변 지하수에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측정하는데 유독성 물질 검출되었고, 매립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됨. 주민감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밝혀짐. 원칙대로 하게 되면 매립물을 파내고 보수공사를 해야 함.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6개월 정지시킴.
- 충북 제천은 오염수 매립장, 농지나 하천, 저수지 오염과 연결됨.
- 산업폐기물은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면 안 되며 공공이 해야 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음.
- 최근 일본 산업폐기물 연구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영리기업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하고 있고 최근에 산단과 결합하여 하려고 하는 편법이 일어나고 있음.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법으로 30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연구자에 따르면 100년은 더 해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30년으로 한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 기준이 아님.
- 산업폐기물 매립 문제는 민간기업에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⑤ 이후 방향

- 농업진흥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진천은 상징적인 지역이며 괴산은 무분별한 개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의미있는 지역임. 공론화

와 여론화가 필요함.

-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는 ① 산업단지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 ②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도 개선 ③ 농지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 토론이 필요함.

○ 토론회 참여자 발언

① 대기마을 김용자 이장

- 우리나라 정부에서 농업농촌농민을 대하는 태도가 산업단지 개발사례를 통해 보여짐. 농지를 파괴하고 농민을 내몰고 있음. 대상지 중에 종종 땅이 많고 보호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더 중요한 것은 지정폐기물은 수백 년이 갈 수도 있으며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함. 농지 깊숙이 파고들어 후손들이 뿌리내릴 수 없게 만들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부정하는 것임.
-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함. 21세기에 일어날 일이 아님. 지자체장의 횡포와 폭정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 지역 주민들 사이의 분열을 일으켜 평생 상처가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되고 우리 마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음.

② 중흥마을 류임걸 이장

- 괴산에 벌어지는 것은 괴산군수의 횡포임. 지역주민들이 자원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음. 토지편입만 하면 된다는 과정에서 지금도 오늘도 공무원을 동원해 가정 방문하면서 괴산군민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토지주들을 만나고 대책위나 이장을 만나지 않고 있음. 지역민을 몰아내려는 군수의 횡포가 진행되고 있음. 우리 군수가 아니고 개발업자의 하수인과 같음. 면장을 통해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혹시키고 있음.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하고 있음.
-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

③ 신송규 괴산군의원

- 의원 간담회를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기했으며 중점적인 내용은 수질오염을 포함한 환경 때문에 반대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이 피산에 있어도 분양권이 있어 주소를 옮기지 않음.

- 우춘식 위원장님이 의료 폐기물 때문에 원주 환경부를 갔다 오셨다고 함. 적합판정을 내린 것임. 환경부로 간 것임.
- 산업폐기물도 사리주민들의 환경이 악화되면 안 되는 것으로 반대하면서 환경부에 이야기하고 군에서도 직접 나서 해야 함. 군과 민간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이야기를 함.

④ 우춘식 전 주민자치위원장

- 산업단지가 사리면민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음.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 미래가 걱정되어 반대하고 있음. 군수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⑤ 박중서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2002년 경기도 팔당으로 귀농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9년 팔당지역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110명의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땅이 수용됨. 팔당지역은 30년 동안 유기농산물을 매개로 소비자와의 연대가 이루어진 곳임. 자전거도로 등으로 16만 평의 농지가 수용되는 상황이 되었음. 하천부지의 농지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나 일부는 수용되었고 두물머리는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3년 3개월 동안의 투쟁이 마무리됨.
- 투쟁과정에서의 힘은 시민단체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가 함께 한 것이었음. 농지를 지키고자 농촌, 고향을 지키려는 가치들을 많은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알리면서 연대를 해야 이길 수 있음. 여러 단체들과 이런 가치들을 알려 나가면서 연대하면 좋겠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음.

⑥ 서봉석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야 함.

⑦ 조태희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산업단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의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국가적으로도 손해임. 개발된 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함.

⑧ 박경철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농민권리선언과 관련된 것으로 농민권리선언이 유엔에서 선포, 국제협약까지는 아니나 국가가 준수하도록 권장, 권고하는 수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는 끝까지 기권함. 농식품부와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토지 문제, 종자,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괴산군 사례에서 토지수용위원회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허용이 된다면 합당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가 직결된 것으로 토지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현장토론이 처음이나 토지 난민은 전국적 현상으로 낮은 농지 가격은 자본이 먹기 좋을 것,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임.

⑨ 윤병선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 충북도 슬로건에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나와 있음. 민간기업에게 토지이용과 관련된 토지 처분 권한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농민권리 전에 재산권도 있고, 과거에 개발주의 당시에 만들어진 법률 체계까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현장에 농민들이 연대하고 싸우라는 것 외에 농특위가 주관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심. 헌법 소원 등을 포함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벌어지는 다양한 침해와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오늘 이야기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특위의 역할이 필요할 것임.

□ 금후계획

- 농특위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차원의 성명서 발표 등 후속사업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토론회 사진>

